

# 권익위, 청렴도평가 범위 확대 ‘반부패 개혁’ 국정과제 뒷받침

대학·공사·공단 등 대상 추가  
청렴노력도 평가 모형 정립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국공립대학과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평가를 대폭 확대한다. 미래세대 청렴문화 확산과 지방 현장의 부패 취약분야 개선에 초점을 맞춰 국정과제인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권익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회 등 총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반부패 개혁의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국공립대학 평가를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신입생 모집인원 2500명 이상 국공립대 16곳만 평가했지만, 올해는 4년제 국공립대학 29곳과 과학기술원 4곳 등 총 33개 기관으로 대상을 넓힌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이 11일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

지방 분야 평가도 강화된다. 기초의회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등급(4·5등급)을 받은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평가하고, 지방 현장의 부패 위험분야 개선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공단 평가 대상도 확대한다. 지난해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19개 기관에 한정됐던 평가 대상은 올해 교통·도시철도, 시설관리 기관 14곳이 추가돼 총 33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특히 권익위는 올해 청렴노력도 지표를 통해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현장

이행 수준과 공공재정지급금부정수급 점검을 집중 유도할 방침이다. 형식적 제도 운영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반부패 개혁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K-CLEAN’ 청렴노력도 평가모형을 정립해 반부패 추진 기반(K), 청렴문화 확산(Culture), 부패통제 강화(Law), 부패 유발 요인 해소(Eliminate), 제도 운영(Adoption), 반부패 협력(Network)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철도·도로 등 5년간 100조 민자사업 발굴

### 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AI DC·전력망 등 신규사업 확대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대의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이는 민간자본 중심으로, 철도·도로 등 정부가 대부분 주관해 온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에 건설 및 운영을 맡기게 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11일 ‘2026년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의 신규사업 발굴을 목표로 한 ‘민간투자활성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신산업 분야의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신사업·신유형을 확

대할 방침이다. 신사업으로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철도복합시설 등에도 민간자본을 도입한다.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부동산(시설)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사업을 민자 유형으로 명시한다. 올해 1분기 중 사업모델을 마련해 연중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내년 중 1호 민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력망특별법 개정과 국민성장펀드 지원 등으로 전력망 구축에도 민간자본을 활용한다. 철도복합시설은 올해 안에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내년에 ‘철도 복합개발시설’ 1호 민자사업 선정에 나선다.

정부는 그간 민자시설에만 가능했던 ‘운영형’ 민자를 재정 시설에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량·증설이 없는

‘단순 운영형’도 새롭게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유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민자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한다. 또 펀드 자산을 선순위 채권으로 구성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안정성을 높인다. 사업자가 이 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사업자 선정 시 가점(1000점 중 20점)도 준다.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1억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을 15.4%로 분리과세해주는 공모 인프라펀드 과세특례 일몰을 2028년까지로 연장한다. 또 ‘만기 없는 인프라펀드’ 신설 및 차입한도 확대 등도 병행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기후부, 탄소국경조정제도 지원방안 모색

탄소배출량 감축 등 지원책 15건 제시

정부가 유럽연합(EU)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지원책 총 15건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유관부처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열고 올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후부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원책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6건) ▲탄소배출량 감축(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건) 등으로 나뉘어 추진한다.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

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고,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 교육과정 등을 제공한다.

오는 2028년부터는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총 2~3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탄소배출량 산정 등 역량 내재화를 위한 실습을 포함해 총 33회 운영된다. 유관기관들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해수부,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민관합작 폴란드 물류센터 지분 인수

해양수산부가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폴란드 내 물류센터 투자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폴란드 카토비체 시에 조성된 물류센터는 동유럽 최초의 ‘공공지원 물류시설’이다. 부지 10만8951㎡(3만3000평)에 5개 동으로 구성된 대형 물류시설이다.

투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과 더불어 LX판토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성사됐다. 이는 국정과제 및 지난해 12월 발표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의 한 이행 사례다.

해수부는 그간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부산항만공사 등과 물류기업 간의 합작투자를 적극 지원해 왔다. 이번 투자로 해외 ‘공공지원 물류시설’은 10개소로 늘어났다. 앞으로도 물류 거점 다변화를 위해 동유럽, 동남아 등 핵심 국가에 물류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동유럽 물류거점 확보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유럽에 더욱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작년에 수립한 대책의 충실한 이행과 국제적인 물류공급망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물류 기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한자연-범한퓨얼셀, 액화수소 기술개발 맞손

액화수소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확보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한자연)이 범한퓨얼셀과 손잡고 액화수소 기반 수소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한자연은 지난 10일 충남 천안시 풍세면 한자연 본원에서 범한퓨얼셀과 ‘액화수소 활용 전주기 기술 개발 및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의 저장·운송 효율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액화수소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액화수소 전주기(저장·충전·활용) 기술개발 및 실증 협력을 통한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 ▲민·군을 포



진종욱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왼쪽)과 황정태 범한퓨얼셀 대표가 지난 10일 한자연 본원에서 ‘액화수소 활용 전주기 기술개발 및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합한 수소 산업 응용 분야 확대 ▲액화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시험·평가·실증 지원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연구사업 기획·발굴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중부발전, 신안우이 풍력사업 961억 출자

재생에너지 선도 개발사 입지 강화

한국중부발전이 전남 신안 해상에 조성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961억원을 출자하며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나섰다.

중부발전은 11일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에 961억원을 출자해 주식 9610만주를 신규 취득했다고 밝혔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총사업비 약 3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390MW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조성되며, 2029년 2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재원 조달을 완료했으며, 오는 4월 해상부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출자는 중부발전이 지난해 100MW 규모 한림 해상풍력을 준공한 데 이어 추가 대형 프로젝트 참여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선도 개발사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는 평가다.

/세종=한용수 기자

##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수칙 5계명’ 공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수칙 5계명’을 공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사는 설 연휴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전기안전 체크포인트로 ▲장기간 외출 시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사용 후 난방기기 전원 차단 ▲젖은 손으로 전기제품 사용 금지 ▲가습기는 콘센트와 충분한 거리 유지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등을 제시했다.

특히 명절 음식 준비로 주방 가전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젖은 손으로 가전제품을 만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귀성·귀경 등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전기난로·전기매트 등 난방제품의 전원을 반드시 차단해야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했다.

/세종=한용수 기자